## 대학이 바라본 '2007 고등교육 부문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정해년(丁亥年). 우리 대학들이 꼽은 '2007년 고등교육 부문 10대 뉴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2007년 12월 7~14일까지 일주일 간 회원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이 바라본 2007 고등교육 부문 10대 뉴스' 선정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2007년 1~12월 초까지 언론에서 다뤄진 고등교육 관련 주요 뉴스들을 기초로 총 20개항목을 예비 선정한 후, 10개를 순위별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참여 대학은 고려대, 부산대, 포항공대 등 총 78개 대학이다.

1위는 지난 2005년 12월 개정된 이후 올해 재개정을 놓고 교육계와 정치권 간의 뜨거운 논쟁이 일었던 '**사학법**'이 차지하였다.

2위는 2007 상반기에 뜨겁게 쟁점화된 '교육부- 대학 간 3불정책 이견'이 차지하였다. 3불정책은 각 정당 대선후보들 의 교육공약의 핵심으로 각 후보자들 간에 극명한 차이를 보였으며, 후보들 모두 현 대입제도를 바꾸겠다고 공언하였다.

3위는 7~ 9월 이후까지 장기간에 걸쳐 언론의 톱 기사로 다뤄졌던 '신정아와 허위학력 논란'이 차지하였다. 일명 권력형 로비 스캔들로 불리운 '신정아 사건'은 사회 각 분야 유명인들의 허위학력 논란의 단초가 되었으며, 실력보다는 간판을 우선하는 '학력 만능주의'를 반성하는 계기를 가져왔다. 또한 사회 각 분야에서의 학위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입어, 대교협에 학위검증센터가 설립되었다.

4위는 '로스쿨 논쟁'으로, 2009년 3월 개교 예정인 '로스쿨 대학'선정 및 정원 배정을 둘러싸고 한때 대학가에서 로스쿨 신청 거부운동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5위는 '수능등급제 혼란'이 차지. 올해 처음 도입된 수능 등급제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 가 운데 대학의 학생 선발에도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6위는 '대학가 논문표절 논란' 이 차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조작,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논문표절 의혹 등 논문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를 계기로 대학가에 연구윤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교육부는 연구윤리 규정 제정을 촉구하는 권고문을 발표하고 4개월 간격으로 규정 제정 여부를 조사하여 연구비 지원사업의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7위는 '대학정보공시제 도입' 이 차지. 2008년 5월부터 시행되는 정보공시제로 대학은 학과별 교육과정 편성과 대입전형계획, 입학 현황, 신입생 충원율, 취업 현황,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연구비 지원 현황 등 51개 세부 항목을 공시하여야 하는데,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대학별 비교가 가능해져 이를 환영하고 있지만, 대학입장에서는 정보공시를 통한 대학별 비교로 대학 서열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위는 '대학교수 정년보장 심사 강화' 가 차지. KAIST가 정년보장 심사에서 15명을 무더기로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수 철밥통 깨기' 가 대학가에서 다시 큰 주목을 받았다.

9위는 2008 대학입시에서의 고교 내신 반영비율을 둘러 싸고 정부와 대학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6월 26일 청 와대에서 열린 '노대통령-대학총장 토론회'가 꼽혔다.

10위는 매년 3~4월이면 되풀이되는 '대학가 등록금 갈등' 이 차지. 올해 역시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 삭발 등으로 대학가가 시끄러웠다. 이후 정부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등록금 후불제'시행을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서남표 총장의 KAIST 개혁', '교수노조 설립 논쟁', '명문대 편입학 의혹', '대학적립금 주식투자 및 주 식회사 설립 허용', '대교협, 학위검증센터 설립', '2007 대 선- 교육정책 공약', 'BK21 사업 부진 42개 대 68억 삭감', '서울대 공대 교수 공채 사상 첫 무산', '대학과목 선이수제 도입', '총장·교수의 정치참여 논란'등이 대학가의 큰 이 슈가 되었다.